

ISSUE & FOCUS

Newsletter 2017-9

NGO 청년 활동가가 본 북핵문제

문동희 북한인권학생연대 대표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북한은 지난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진행하였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북한의 이번 핵 실험이 수소폭탄 이전의 '증폭핵분열탄'으로 폭발력이 과거에 비해 6배 정도 강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빠른 핵개발 속도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있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도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핵 비확산 체제 보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중국의 단호한 입장이자, 국제사회의 열망”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역량이 높아지고 운송수단인 미사일 능력까지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국제사회의 우려는 첫 북핵 위기가 있었던 1994년과는 사뭇 다르다. 1994년도 당시에는 북한의 핵능력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국제사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가진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력해짐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20년 이상 우리의 관심에서 방치됐던 북한의 북핵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북핵 국면, 그러나 변한 것이 없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둘러싼 5개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핵무기가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북한정권은 북한주민 삶과 인권보다는 정권유지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핵 포기는 곧 정권의 붕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북한을 버퍼존(Buffer Zone)으로 인식하고 이용하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리스크보다 버퍼존으로써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물론 지금까지도 말이다. 반면 미국은 자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오바마 정부 때부터 취해온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정책으로 과거보다 집중력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는 동북아에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북핵을 이용하려 하고 일본은 미국과 같은 노선을 걷기 위해 발걸음을 맞추어 나갈 것이다. 한국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북핵 문제의 이니셔티브(Initiative, 주도권)를 쥐고 싶어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와 구도가 20년 넘게 지속되어 왔으나 해결은커녕 변한 것 하나 없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같은 입장과 이해관계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된다. 이제는 20년 간 가져왔던 기존의 생각들을 바꿔야 할 것이다. 2008년 이후 열리지 않는 6자 회담에 목을 맨다거나 유엔 대북제재 정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키신저 해법과 코리아 패싱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미·북 간의 직접 대화보다 미·중 외교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핵무장이 미국보다 중국에 보다 큰 이해관계가 걸린 사인이며 이를 미국과 중국이 외교로 풀어나가야 하고 동시에 한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주변국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듯하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으로 불리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이 강력한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고 있을 때 한국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특사단은 중국 측으로부터 사드 철회요구만 듣고 왔을 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그 어떤 말 한 마디 꺼내지 못했다.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는 없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측된 식민지배 국가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15년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은 남한은 미국에 철저히 예측된 식민지라고 비난한 바 있다. 최근 노동신문은 “괴뢰(남한)들과 핵 문제를 논의하는 일은 추후도 없을 것...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라고 말하며 한국을 철저히 배척하고 있다.

전략 없는 한국의 대북·북핵 정책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 북핵 정책은 전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파열음을 내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건대,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주도권 잡기를 원한다.

허나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북핵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서 주도권 쟁탈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이 아닌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쏟기에 다른 국가들과 손발이 맞지 않고 특히 미일과는 파열음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 보도된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은 대화를 구걸하는 거지같다”라고 한 발언을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발표했지만 한미일 삼각동맹 사이에서 비생산적이고 불편한 마찰음이 자주 들리는 것은 좋지 않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기본전략은 한미일 동맹을 베이스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무대에서 한국은 주연이든 조연이든 뭐든 중요치 않다. 뚜렷한 문제해결 목표가 있고, 동맹국인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흔히 미국과의 관계 결속이 중국의 반감을 산다고 걱정할 수 있으나 이미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다. 힘의 역학관계를 이용하여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핵문제에 대한 NGO 역할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NGO에서 오랜 시간 일 해오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우려하며 비판해왔다. 북한은 1990년 후반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식량난을 겪을 때, 자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리고 있는 자국민이 아닌 핵개발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국가 자원의 상당부분을 민간영역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한 핵개발에 사용한다.

『2017 북한인권백서(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제약공장이 경제난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일반인들이 의약품에 접근하기 매우 어렵다.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제약공장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약초재배 운동을 독려하는 북한정권이 핵개발에 수 조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자원을 핵, 미사일, 군대 등에 집중하여 파생된 경제적 위기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폭력을 행사하는 곳이 북한이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역시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국가와 더불어 NGO 차원에서도 고민, 활동해 보기를 제안한다. 1945년 유엔이 창설되고 국제사회에서 많은 NGO들이 국제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초창기 NGO들이 국제원조활동에 국한되어 활동하였던 것과 달리 지금은 개별 국가나 유엔 기구에 자문을 하는 등 활동범위와 수준이 매우 넓어지고 다양해졌다. 유엔 역시 NGO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있다.

UN에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 개선의 목소리는 1990년대 중,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를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NGO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북핵 문제 해결을 전달하는 창구가 정부만이 아닌 NGO영역에서 나온다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중국의 동북 3성 지방의 사람들에게 방사능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을 보급하여 북핵 문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이라든지 웨이보, 웨이신, 티엔야왕 같은 중국의 SNS, 커뮤니티에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리는 NGO의 노력들이 국가차원 노력과 병행된다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청년이 기대하는 북핵 정책

1994년에 이뤄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핵문제가 일단락이 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합의는 2003년 북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은 계속 핵능력을 강화해왔다. 6자 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다가 2008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국무부는 6자 회담 특사직을 폐지할 예정이다. 슬프게도 1994년과 2017년의 북핵문제는 북한의 핵능력이 높아진 것 말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1994년에 태어났던 아이들은 어느새 대학을 졸업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간동안 북핵문제 위기만 키워온 셈이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북핵문제가 고착되어 간다면 1994년생의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국제사회가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북핵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을 위한 진전을 기대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북핵 정책도 보다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이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정부차원을 넘어 NGO영역에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병행되기를 바란다.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생존가방을 챙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국가는 부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